

민주 '명태균 영장 청구'에 "전형적 꼬리자르기" 비판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의혹 빠져" "특검에 총력... 국민적 의혹 규명" 조사단 "15일 창원서 진상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예정된 수순이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뺐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에 관한 수사는 오직 특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씨는 검찰과 플리마켓(사법 협조자에 대한 조건부 감형 제도)을 했을 수 있지만, 결국 검찰에게 배신당하고 후회만 할 것"이라며 "명씨가 사는 유일한 길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검찰이 책임을 포기한다면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는 특검의 당위성을 부각시킬 뿐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영선 의원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공천을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를 언급하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라도 대

통령의 육성을 숨길 수는 없다. 정치검찰이 명씨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끝없이 쏟아지는 명씨의 녹취들을 막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제 고작 2년 반도 남지 않은 알량한 권력에 기대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범주를 지우려는 무모한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입찰작 수사로 더욱 커질 국민의 '특검' 요구를 받아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5일 명태균씨의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창원 산단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김기표·허성무 의원은 "명씨는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경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왔을 때 직접 안내를 했다"며 "또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경경 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무런 공적인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태균 씨가 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진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한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수상한 거래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조사본부는 "2023년 1~3월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77건 중 69건(89.6%)의 거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졌다"며 "2022년 5~12월 158건이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2023년 1~3월 석 달 동안 210건으로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본부는 "이 기간 총 368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 중 산단에 편입된 경우는 102건이었는데 '매매' 66건 중 9건은 지분매입 형태였고, 한 번에 두 필지 이상 '토지쇼핑'을 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며 "투기꾼들의 개입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2년 전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일정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 특별열차에 동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김선옥 기자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 추경호(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진옥·전진숙,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선정

광주지역 초선인 정진옥·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뽑은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이날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국정감사 평가를 통해 재벌개혁 분야에서 정진옥 의원(광주 동남갑),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등 15명을 국감 우수 의원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재벌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국감은 보좌진의 지혜와 따옴으로써 이뤄지는 일"이라며 "어렵고 힘든 국민을 위해서라도 치밀하고 치열하게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전 의원은 지역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 공공 의사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하고 입체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정부에 촉구



해 왔다. 경실련은 두 의원에 대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생 현안에 집중하면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책 대안의 개혁성과 구체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화해 이같이 평가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국감이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정치권이 권력 투쟁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아 민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옥 기자

민주 특검법 수정안 '도이치·명태균' 압축... "비토권 갖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되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는 내용의 '김건희 특별검사법' 수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에 따르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성안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추천된 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할 예정이다.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였다.

명씨 의혹은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선거·이권·인사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다. 명씨를 통한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김 여사의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총선 개입 의혹, 명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김선옥 기자

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안은 부자감세... 수용불가"

"배우자공제는 10억으로 확대"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방안은 개정 항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법안에 반영할 수 없다"며 "아직 검토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차원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체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액을 높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기재위원은 지난 8월 현행 상속세 일괄공

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상위 1%에 해당한다"며 "배당이 확대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선옥 기자

尹, 14~21일 페루 APEC·브라질 G20 참석

한일·한중 정상회담 가능성 높아 "트럼프 회동 위해 긴밀히 소통 중" 윤 대통령은 15일 리마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이 내년 APEC 정상회의의 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16일에는 APEC 회원국 정상들만 모이는 리트리트 세션에 참석해 기후 위기 시대 속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주요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출발한다. 윤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은 이번이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18일 브라질에 도착해 G20 의장국 브라질이 추진 중인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한다. 19일 열리는 제3세션에서는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APEC과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소화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베트남, 멕시코, 브루나이, 일본 등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자회의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더 많은 국가와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중남미 순방의 의미에 대해 "다자 정상회의의 외교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 외교 구현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 강화 △중남미로의 외교지평 및 실질 협력 확대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순방의 최고 관심사인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인과의 회동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측과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서울=김선옥 기자